

## 대규모 사업장의 평균정년 소폭 상승세 유지

- 고령자 고용률은 규모가 클수록 저조

노동부가 금년 3월, 지난 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2,318개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정년은 57.14세로 나타났으며, 정년 변동 추이를 보기 위하여 2007년 조사대상 사업장 1,956개소의 2008년 정년을 분석한 결과, 56.97세로 0.02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의 94.75%인 2,197개 사업장이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장의 70.9% (1,644개소)가 직급 또는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정년을 적용하는 단일정년제를 운영하고 있다.

직급별 정년제와 직종별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각각 10.9%(254개소), 9.0%(209개소)이다. 한편, 단일정년제 도입 사업장 중 정년을 55세 이하로 정한 사업장이 660개소이며, 305개소의 사업장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일정년제를 운용중인 사업장 중 정년을 55세로 정한 사업장이 39.8%(655개소)로 가장 많고, 58세가 21.8%(360개소), 60세 이상은 13.1%(305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운수업(58.91세), 광업(58.33세), 부동산 및 임대업(59.36세) 등이 평균정년 보다 높았고, 건설업(56.62세), 숙박 및 음식점(56.46세), 도매 및 소매업(56.34세)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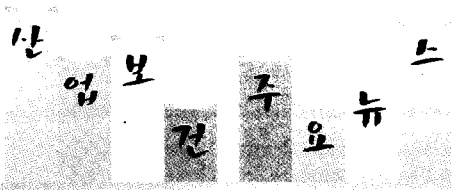
규모별로는 300-499인 사업장이 57.37세, 500-999인 사업장이 57.09세, 1,000인 이상 사업장이 56.82세로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 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55세 이상 고령근로자가 191천명 고용되어 고령자 평균고용률은 7.19%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및 임대업(36.19%), 기타 서비스업(14.68%), 운수업(10.14%) 등은 고령자 고용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통신업(1.26%), 도·소매업(1.74%), 금융 및 보험업(1.54%) 등은 낮게 나타나 업종 간 차이를 보였다.

규모별로는 300-499인 사업장이 12.39%, 500-999인 사업장이 10.52%, 1,000인 이상 사업장은 5.07%로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고령자 고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년이 현저히 낮은 사업장과 고령자 고용률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년연장 및 고용확대를 적극 권고하는 한편, 각종 장려금 지원과 홍보 노력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건설 일용근로자 10만 명 안전교육 실시

'09. 6. 22부터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10만 명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건설안전교육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안전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현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더불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능력향상 건설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4시간의 '건설안전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이수증이 발급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받아야 하는 신규채용교육을 2년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건설사에서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서 건설 근로자의 취업이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선정된 교육기관에게는 교육지원금으로 교육생 1인당 2만원을, 교육생에게는 식비·교통비로 15천원을 정부가 부담한다.

교육은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등 6개 권역별로 실시되며, 교육기관 공모를 통해 수탁 기관을 선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응모대상 기관은, 노사단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 산업안전보건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건설안전교육 실시 능력을 갖춘 기관이다.

교육기관 선정에 응모할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6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교육계획서와 교육기관 현황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쳐 16일 지역별 총 16개 교육기관이 최종 선정된다.

'08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 중 대부분인 88.9%가 6개월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일용직 등의 고용특성으로 대부분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